

# “넓고 사고 많은 노후원전, 수명 연장 안 된다” 반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10년 연장...지역민 반성

## “4호기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안정성 신뢰 못해...계획대로 폐로해야”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조기 포화 예상...해결해야 할 문제점 산적

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은 잦은 사고와 정비 불량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를 당초 계획대로 2025년과 2026년에 폐로(廢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민 반발 확산=지역민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고치지 않고 부설시공 사실이 드러난 한빛 3·4호기까지

계속 운영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최초 가동 이래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냈다. 원전안전운 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5월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사고가 발생했다. 낙하사고로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서 잠 시나마 폭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같은 해 2월 한빛 2호기에선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한빛 1·2호기 격납건물(돔) 시멘트에서 수십개의 공극(빈 구멍)과 1000여개가 넘는 철관 결함 등이 발견 돼 부설시공 흔적까지 드러난 상태다.

최근 지역민 1만4000여명이 한빛 1·2호기를 폐

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영광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이 부설시공으로 140여개의 공극이 발견된 한빛 4호기를 보수 공사 후 5년 여만에 재가동하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2호기 연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11월 한수원 측은 한빛 4호기 재가동에 앞서 ▲가동 전 대국민 사과 및 군민 명예회복 ▲격납건물 구조 건정성 제3차 평가 실시 ▲격납건물 상부돔 CLP검사 ▲국회차원의 부설공사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을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영광 군의원 8명은 한수원측을 상대로 원자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위원장은 “지역민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1·2호기 연장을 계획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도 난제=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긴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전제로 한빛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2031년 포화될 예정인데 1·2호기를 계속운영 하면 2029년 저장시설이 꽉차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여야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저장시설이 다 차는 기간 내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영광원전 내부에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임시보관 시설(원전 부지 내 신축) ▲중간저장시설 ▲영구 처분시설 등으로 나누고 중간저장·영구 처분시설 부지의 경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과연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자신들 동네 옆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 주민들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받을 계획”이라면서 “1·2호기 계속운전시 포화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는만큼 이를 반영해 시기를 재산정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기물대책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군수와 친해” 지자체 발주사업 알선 10억 챙겨

광주지검, 브로커·업자들 기소

‘군수와 친하다’며 장흥군 발주 사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10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준 B(47)씨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30억6000만원 규모의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5억5000만원 규모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업자들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A씨의 처가 조카인 미성년자를 확대지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남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 장흥군수 후보 시절 수행비서라는 점을 활용해 장흥군청 마을방송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담당 업체관계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사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과 전 장흥군수 등도 조사했으나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장흥군 ‘승마체육공원’ 수탁자가 마을방송사업에 비리가 있다며 광주지검에 진정을 내 수사가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추워진 날씨, 모닥불이 최고

설 명절을 1주일 앞둔 15일 오전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한 노점에서 상인이 모닥불에 몸을 녹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 곤다” 물류센터 동료 흥기 살해 20대 구속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 동료를 흥기로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장은 15일 A(26)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의 물류적체장에서 40대 동료 B씨를 흥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발생 직전 A씨와 B씨는 물류센터 내 휴게

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는데, 코를 골며 자고있는 B씨에게 A씨가 “코 좀 골지마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물류센터에 유통상품으로 보관중인 흥기를 가져왔고, B씨가 휴게실에서 나오자마자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민행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학생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송치에 전국 동료 교사 1800여명 “선처해 달라” 탄원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15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기소 의견)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800여명이 탄원 연명(1337명)에 참여하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내왔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한 초교에서 학생들이 싸

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

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학생이 흥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아 주목시키기 위해 멀리 있는 책상을 넘어뜨려 싸움을 멈추려 한 것”이라며 “반성문을 찢은 것도 ‘행동 돌아보기’ 양식을 학생이 작성하며 친구와 싸운 부분을 적지 않아 다시 쓰라는 취지로 찢은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교사노조 관계자는 “전국 교사들이 현장의 애로와 고충에 공감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교사와 학부모간 학생을 가르치는 문제로 다툼이 잇따르고 있어 노조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